

# 전북 방문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소외된 30%의 목소리 들을 것”

### “제3의 목소리 의회 반영될 기미 봉쇄돼”... 현 국회 양당구도 비판 “전북 10곳에 후보자 낼 것...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분 모시고 싶다” 제3지대 빅텐트 관련 “이번주부터 협의 본격화... 결과 지켜봐야”

21일 전북을 방문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현재 국회 양당구도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며, 여기서 소외된 30%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의석 전부를 양당이 나눠가지고 있어 제3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기미가 봉쇄돼 있다”이라며 “제3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하고 양당의 기득권이라는 벽에 막혀서 정치참여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 의회에 반영해 (국가)안정적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후보자 출마와 관련해서는 “전북 지역구 10곳 모두에 후보자



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신경민 의원은 출마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철옹성 같은 양당의 벽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없는 분 중 신선하고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분들을 모시고 싶다”고 보냈다.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 이번주부터 협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이 위원장은 “제3지대 텃바구니 속에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만들 수 있을지 이번주부터 협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를 직접 나가

는 것이 아니다보니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협력의 방법은 몇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공식협회가 진행되고 조금 더 본격화되는 시기라서 협의 테이블에 맞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당 창당에 대해 분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열이 아니라 재건이고 확대”라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를 뺀가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떠나신 분들을 투표장으로 모셔서 다시 우군으로 만든다면 아군이 커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탈당 이유에 대해서 “당내에서 변화를 위해 조용한 방식으로 노력

했으나 무망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다”라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강성당원 7만여명이 제명 요구를 했는데 의원들은 말리지 않았다. 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가 그 직전에 육살을 퍼붓는다. 이것은 동지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민주당과 완전히 결별한 점도 강조했다.

또 자신의 총선 불출마와 관련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지들이 총정으로 저에게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하루가 급하다. 위기 상황을 놔두고 대선을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속한 새로운미래는 오는 27일 전북자치도당 창당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인품이 좋고 지역사회에서 신망받는 분들 가운데 위원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반



강성희 진보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경호처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尹,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북자치도 출범식서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해 “김진표 의장 조만간 만나 국회차원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강제 퇴장을 당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이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해의 순방 중 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벌어진 사건은 매우 참담했다”며 “헌역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짓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대하겠나.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수많은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데 호원에게 막혀 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의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개인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으로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라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의원의 면담을 추진 중”이라며 “(김 의장이) 지금 해외순방 중이라서 답장은 어렵고 빠르게 소통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강 의원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포정치가 민주주의를 끌어내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것은 군부독재 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행사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가 용납해선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됐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아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제로 끌려 나간 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을 강제 퇴장 시킨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대통령경호처의 조치를 ‘명백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뉴스

## 새로운미래 “당대표 권한 줄일 것... 집단지도체제 도입”

### 당헌 제정 기본방향 발표 시민 의견 수렴 간담회서 최고위원→책임위원 변경 당대표·책임위원 동시 선출 윤리심판원장 전대서 선출 당무검증팀도 운영키로



이석현 새로운미래 당헌제정위원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헌 제정방향 발표 및 시민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창당을 준비 중인 ‘새로운미래’ (가칭)는 지난 19일 당대표 권한을 줄이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 제정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헌 제정 기본 방향 발표 및 시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고 당내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당의 최고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에 참여하는 최고위원 명칭을 ‘책임위원’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정당과 달리 당대표와 책임위원 동시에 선출키로 했다. 책임위원 중 최다득표자가 대표책임위원이 돼 당을 대표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앙당 윤리심판위원을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선출하도록 했다. 기존

정당은 당대표가 윤리심판위원장을 지명한다. 윤리심판위원장이 당대표 눈치를 보지 않고 당헌·당규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무검증팀을 운영한다. 당무가 결정되기 앞서 내부에서 문제점을 찾고 지도부 결정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도덕성 강화를 위해 당헌에 음주, 성범죄, 반사회적 범죄 등 공권 배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당헌제정위원회에 참여한 장덕현 변호사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민 평균 수준의 도덕성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하지는 취지”라며 “보통은 당헌에는 잘 넣지 않고 당규

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저희는 이것을 당헌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지난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북 등 시·도당 창당대회를 거쳐 다음 달 초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 대전환 기회로 살려야”

### 민주 정희균 예비후보 “완주를 전주 등과 함께 4대 전북자치도로 성장시켜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인구 감소와 노년 지역 소멸 위기를 전환할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읍·면·동 행정구역을 지역 상황에 따른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만 개정하게 돼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 자치도와 완주의 수소 산업을 연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주 자립권을 확보하는 등 완주를 전북특별자치도 4개 성장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완주군은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추산한 결과 전년 대비 532만원 증가한 5,739만원으로 집계, 전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8년 5,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완주를 중심으로 전국 골짜기 전북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8년간 해결하지 못한 ‘실제C 진입출로 4차로 확충과 공공과 민간(농림어업종사자 및 일반노동자)의 연금격차를 줄여 노후보장에도 힘쓰겠다”고도 했다. /특별취재반

## 전북여심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업체 등 고발

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024년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A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가 공모해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를 실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

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며,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협조 요청

남원시의회의는 지난 1월 18일, 집행부와 남원 출신 법조인들과의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국립의전원 법안이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남원 시민의 열원인 남원 국립의화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 통과 및 설립 촉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립의전원 법률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기 위함이다.

전경기 의장(사진)은 “작년 국립의전원 법률안이 적극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상정·의결될 수 있도록 향후 법조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민주 도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전국 4번째이자 호남권 유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북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남극 경계권을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방정부에 막강한 행정권한을 이양해, 전북의 현실에 맞는 특화발전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인프라와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과학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후속조치가 조속히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도내 주요 권역별로 필요한 핵심산업과 미래 비전이 도당과 지방정부 간 긴밀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향후 국회 입법 및 지방자치 조례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공에 필요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또한 “특별자치도가 전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180만 전북도민의 단합된 힘과 전북 정치권, 경제인, 공무원의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역내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 부안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의장 김광수)는 지난 19일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를 비롯해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7일간 진행된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청취와 주요사안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강세 의원이 ‘인구가 부안군의 미래다. 특단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김형대 의원이 ‘부안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인구정책 추진과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